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수신처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정당 및 언론사
참고	언론사 사회부
내용	전주시내버스 회사 규탄
담당자	채민(063-278-9331, 010-8639-0214)

[성명서]

시민과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 버스회사를 규탄한다!

- 시민여객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테러와 전일여객 교통사고 은폐 관리자 채용 규탄 -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안하무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교통사고를 은폐하려던 관리자를 다시 채용하는가 하면, 노동조합을 향해 낮을 휘두르는 테러를 버젓이 저지르는 버스회사들의 작태에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시민과 버스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적나라하게 몰상식과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버스회사를 규탄한다!

- 시민여객 사측의 노동조합 테러

4월 13일(토) 오전 8시경, 시민여객 정OO 사장이 민주노총 소속 시민여객 노조 천막농성장에 낮을 휘둘러 천막이 훼손되고 천막 안에 있던 노조원들 중 1명이 정모 사장이 휘두른 낮의 뒷목에 맞아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막에 있던 다른 조합원들 역시 무방비 상태에서 천막을 찢는 낮질에 놀람과 황망함을 감출 수 없었다.

시민여객 노동조합은 회사에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 3월 6일부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회사의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인해 문제해결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돌아온 것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폭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폭력을 휘두른 정모 사장은 경찰에 체포되기는커녕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며 경찰 역시 병원 입원을 방관하는 상황이었다. 노조의 쟁의행위 중 발생했던 사건들로 노동자들을 긴급체포하거나 즉각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에 비해 너무나 대조적인 경찰의 대처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공권력이 과연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 전일여객의 교통사고 은폐 책임자 채용

2010년 11월 전주시 호성동 전당사거리에서 전일여객 시내버스와 오토바이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일부가 삭제되었는데 전일여객 사고처리과장과 버스운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블랙박스 화면의 일부가 지워졌다고 진술했고, 버스운전자는 쌍방 과실로 불구속 처리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로 당시 버스 운전자와 사고처리과장이 사고 당시에 버스의 신호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삭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해당 과장과 운전자는 2011년 10월 법정 구속되어 징역 10개월 실형을 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감했다. 이 사건으로 버스업계와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의 눈길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런데 전일여객은 2010년 교통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던 당시의 사고처리과장을 최근 운전자로 다시 채용했다. 버스노동자들과 버스파업대책위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운전자가 4월 8일 오전부터 전주시 중심가를 운행하는 노선을 회사로부터 배치 받아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소속의 버스노동자들은 시민들을 무시하고 불안과 불신을 일으킨 장본인을 다시 채용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전일여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던 교통사고의 진실을 은폐했던 당사자를 버스운전자로 다시 채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들이 신뢰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과 신뢰가 가는 사람이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막대한 시민의 세금과 요금으로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전일여객의 이번 행태는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는 채용을 한 것이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 관계당국은 버스회사의 폭거에 엄중히 대처하라!

지난 버스 파업부터 버스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단체협상 체결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였다. 또한 버스회사들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강그리 무시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은 시민들의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관계당국 역시 현재 버스 회사들이 저지르는 폭거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전주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일여객의 현재의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한 대중교통 마련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역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사분쟁의 장본인인 버스사업주들을 철저히 감독·처벌해야 하며, 경찰도 시민여객 노동조합을 향한 끔찍한 테러를 한 가해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시내버스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버스회사에 있으며, 안하무인 버스사업주들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버스노동자들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버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갈 것이다!

2013. 4. 15 월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